

“천년문화유산 구례…시시대 인재 영감 공간으로”

김영록 전남지사, 구례군 정책비전 투어
지리산·섬진강 중심 10대 핵심 비전 제시
케이블카 설치·광양 간 도로 개설 등 건의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6일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오픈AI, SK, 삼성과 같은 첨단기업들이 전남으로 몰려들면서 구례에도 기회가 찾아왔다”며 “지리산과 섬진강, 천년문화유산이 가득한 구례가 첨단기업 인재들의 힐링과 영감의 공간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날 구례군 The-K 지리산가축호텔에서 김영록 도지사, 김순호 구례군수, 장길선 구례군의회 의장, 이현창 전남도야원, 청년, 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례군 정책비전 투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구례군이 지닌 천혜의 생태자원인 지리산과 섬진강을 무대로 지역발전과 동서 간 상생 협력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 비전이 제시됐다.

전남연구원은 구례 발전 10대 핵심 비전으로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곳, 다시 흐르는 섬진강’, ‘사성암을 품은 오산, 쉬는 법을 배우는 곳’, ‘지리산 온천권역 대개조 프로젝트’, ‘K-사할 여행의 정수, 불교문

화 거점 구례’, ‘자연과 감성이 어우러진 지리산 명품 관광벨트’, ‘구례을 일·여행+정주 신주거 플랫폼 도입’, ‘산악 아웃도어 레포츠 육성’, ‘대한민국 재생유기농업 1번지’, ‘지리산 산야초·연구·생산·가공·체험 허브 구축’, ‘동서 화합을 견인하는 교통 네트워크 강화’를 제시했다.

이어진 정책현안 토론회에서는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 실·국장, 구례군민 간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김영의 지리산케이블카설치추진위원장은 “지리산 국립공원 환경 복원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영·호남에 각각 1개씩 케이블카 설치가 승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지역 속원사업인 지리산 케이블카는 환경부 주관으로 논의됐으나 지자체 간 과열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조율과 절차 마련을 적극 건의 중이며 구례군이 최적지임을 지속해서 알리는 등 구례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2020년 수해 이후 추진 중인 시설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6일 구례군 The-K 지리산가축호텔에서 열린 ‘구례군 정책비전 투어’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대화사업의 미비 구간 개선 요청에 대해 김 지사는 “폐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과 활성화화를 위해 막구조물, 비가림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도 차원에서 10억원 한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겠

다”고 약속했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가 보유한 지리산과 섬진강은 어느 국가도 가지지 못한 독보적인 생태 경관이자 자연 자원이다”며 “이를 활용한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지

리산 케이블카 사업인 만큼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주민들은 구례 간전 중대~광양 육로 간 도로 개설, 국도 19호선(냉천 IC~화계) 확·포장, 여자 씨름전용경기장

건립, 한국 압화박물관 인프라 개선, 서시천체육공원 체육문화공간 조성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구례=김귀진 기자 kkimin@gwangnam.co.kr

광주교통공사 신입 사장 후보에
문석환씨 내정...27일 인사청문회

광주시는 광주교통공사 신입 사장 후보로 문석환 박관현기념재단 이사장(사진)을 내정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2명 중 1순위인 문석환 이사장을 최종 후보로 내정했다. 문 후보자는 오는 27일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광주시장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광주교통공사는 민선8기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따라 지하철을 중심으로 광주 대중교통체계 전반의 지휘본부로 재편된 공기업으로, 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대중교통체계 재편 등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문 후보자는 20년 이상 감정평가사로 활동한 자산·재무관리 전문가로, 박관현기념재단 이사장과 5·18기념재단 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양동민 기자 yang00@



광주, 지방자치 30년 시민과 함께 ‘자치의 내일’ 연다

10일 시청 시민홀서 ‘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 주민자치 박람회·전라권 간담회·기념콘서트 등 풍성

광주시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 자치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나누는 ‘2025 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을 오는 10일 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손을 맞잡고, 자치의 길로!’를 주제로,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96개 전체 등에 대해 주민자치회 전환을 완료해 자치 기반을 다졌다. 올해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마을자치의 비전과 실현 방안을 논의하며,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례와 모델을 공유한다.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주민자치·마을공동체 박람회, 주민자치·마을공동

체 우수사례 발표회, 마을상회, 전국 네트워크 대화모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시민과 함께 ‘광주다운 마을자치 실천 선언문’을 발표하고, 참여·결정·협력·연대의 가치를 담은 풀뿌리 자치 실천을 선언한다.

‘주민자치·마을공동체 박람회’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성과를 비롯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변화와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각 기관 전시가 열린다. 협치 마을, 마을교육공동체, 인권마을, 여성친화마을, 마을교육공동체, 인권마을, 여성친화마을, 에너지전환마을 등 다양한 주제와 마을활동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상회’ 부스를 운영해 마을기업·협동조합 상품을 현장에서 판매하며, 지역경제 순환에 대한 시민 체험의 기회도 제공한다.

이번 행사와 연계해 10일 오후 시청 1층 열린문화공간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 30주년 전라권 간담회’가 개최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전문가, 주민자치회·마을활동가들이 참여해 자치분권 정책과제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광주시와 행정안전부 공동 주최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시민과 함께 축하하는 기념콘서트’는 9일 오후 7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가 왔다! 모두가 함께 만드는 축제, 광주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민선 지방자치 출범 30주년의 의미를 공유할 예정이다.

박운원 시 자치행정과장은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시민과 함께 자치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참여 기반의 광주다운 마을자치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

정청래 “정년연장 국정과제 이미 반영”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서민 느끼는 변화 크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범정년 연장과 관련해 “단계적 연장이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상당히 반영된 만큼 (노동계의) 의견을 경청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민주노총의 목표인 동시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목표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업제에 없는 노동 현장’을 강조하며 국정 주요 목표로 삼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며 “당에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 과제”라며 “노동자의 산업재해 희생을 막아내도록 이 부분에 속도를 내

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통한 노동법 사각지대 축소, 초기업별 단위 교섭 활성화 등 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언급했고, 교원 공무원(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정년 연장에 대해 “오늘 당장 출생률이 반등하더라도 향후 20년간은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년 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자 작업중지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 교섭,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을 “가장 중요한 노동 현안”이라며 “노동자를 위해 입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임미란 “광주TP 감사 지적 2년째 방치”

광주지역 핵심 산업 지원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가 정계 및 시정조치 사항을 2년째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미란 광주시의원(민주당, 남구2·사진)은 6일 (제) 광주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제단 자체 특정 감사에서 일부 직원이 인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인사위원회가 ‘반단 불가’로 종결하고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시의 세급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감사 지적사항을 장기간 미이행하는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다”며 “공공기관으로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제도 개선이나 인사 조치로 이어지지 않으면 감사의 실효성은 사라진다”며 “공공기



관의 청렴성과 책임성은 행정의 기본이며, 감사 지적사항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와 책임을 담보하는 조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수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도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테크노파크의 수익계약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수익계약의 96.9%가 1인 견적으로 체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수익계약 제도는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특정업체와의 밀착계약이나 형식적 경쟁을 초래할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광주TP의 현재 계약 구조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승기 기자

채은지 “광주시 산하기관 ‘조개기 계약’ 심화”

광주시 산하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거나 계속근로 인정을 막기 위한 ‘조개기 계약’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은지 광주시의원(사진)은 6일 광주주전략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9개월·11개월 단기계약이 반복되고 있다”며 “상시·지속 업무를 임시직으로 둔갑시키거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기준 3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올해 광주시 공공기관 전체 기간제 근로자 인원은 643명으로, 이 중에서 9개월 계약기간 근로자는 132명, 11개월 계약기간 근로자 수는 171명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9개월 계약은 상시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운용하기 위한 꼼수, 11개월 계약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이런 불공정한 관행이 버텨서 이뤄지는 것은 노동법 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급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노동권을 침해하는 구조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시는 산하기관의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1년 미만 계약의 반복을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윤미라 전략추진단장은 “공공기관에서 일반직 중심의 업무 운영 원칙을 지키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가 양산되는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불공정한 인사관리 등 문제점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수용도와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장승기 기자 sky@

박수기 “미래차진흥원 내부 감사 유명무실”

박수기 광주시의원(사진)은 6일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감사의 형식적 운영과 조직 내 기강해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최근 진흥원 전 직원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드러난 내부 문제와 관련, “유서에 언급된 금품수수, 직장 내 갑질, 부적정 계약 의혹 등이 내부 감사에서 대부분 ‘문제없음’으로 결론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면피성 감사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또 진흥원은 사전 직후인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불과 일주일간 내부 감사를 실시하면서도, 감사업무는 행정지원팀 소속 직원 1인이 전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 직원이 감사 대상 부서의 행정지원팀 소속의 하위 직원이었다는 점으로, 감사 수행 주체와 피감 대상이 동일 조직 내에서 오랫동안 근무 연이 있는 관계로 감사의 객관성과 독립



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감사 규정상 외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에도 이를 구성하지 않았고, 감사 기간도 지나치게 짧아 사실상 부실 감사로 끝났다”며 “사건의 종대성과 다수 내부자가 얹힌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했다면 외부 전문가를 통한 교차검증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래차 산업을 담당하는 광주의 핵심 공공기관이 시민의 신뢰를 추락하면 국가사업 추진력도 무너진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이해당사는 점으로, 감사 수행 주체와 피감 관계에서 벗어난 외부 전문가 중심의 투명화 감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승기 기자 sky@